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안」

2016.09.08.

남주하 (서강시장경제연구소장)

주요목차

I. 연구의 목적

II. 국내 신용회복제도의 현황 및 실적

1. 우리나라의 사적 채무자구제제도
2. 신복위의 개인신용회복제도
3. 최근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내용
4.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

III.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의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 사례
2.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의 시사점

IV. 사적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I. 연구의 목적



❖ 가계부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예상되는 금리변화에 따라 가계 채무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표 1> 가계부채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비 고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3
가계 신용	금 액	214	266.9	341.7	464.7	472.1	494.2	542.9	607.1	665.4	723.5	776	843.2	916.2	963.8	1,019	1,085.3	1203.1	1223.7
	증감액	30.4	52.9	74.8	97.4	7.3	22.2	48.7	64.3	58.3	58.1	52.5	67.2	73	47.6	55.2	66.2	117.8	125.4
	증감률(%)	16.5	24.7	28	28.5	1.6	4.7	9.8	11.8	9.6	8.7	7.3	8.7	8.7	5.2	5.7	6.5	10.9	11.4
가계 대출	금 액	191.9	241.1	303.5	416.8	445.4	468.9	514.8	575.6	630.1	683.6	734.3	793.8	861.4	905.9	960.6	1,025	1,138	1158.5
	증감액	26.1	49.1	62.5	87.6	28.7	23.5	45.9	60.8	54.5	53.5	50.7	59.5	67.6	44.6	54.6	64.5	112.9	119.1
	증감률(%)	15.7	25.6	25.9	28.9	6.9	5.3	9.8	11.8	9.5	8.5	7.4	8.1	8.5	5.2	6.0	6.7	11	11.5
주택 담보 대출	금 액					152.5	169.2	190.2	217.1	268.3	311.2	338.5	362.8	392	404.2	418.1	460.6	501.2	509.3
	증감액						16.7	21.0	26.9	51.2	42.9	27.3	24.3	29.2	12.1	13.9	42.5	40.6	39.4
	증감률(%)						11.0	12.4	14.1	23.6	6.3	8.8	7.2	8.0	3.1	3.4	10.2	8.8	8.4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 자금순환동향.

주: 가계신용= 가계대출+판매신용(여신전문기관+판매회사), 가계대출=일반대출+주택 담보대출
=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기타금융기관(보험, 여신 기관 등)

주택담보대출= 예금은행+비은행예금취급기관(2007년~)

1.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산업의 기여

I. 연구의 목적

- ❖ 정부도 이러한 서민금융의 어려움과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지원을 일원화하기 위해 서민금융통합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정책성 서민금융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대부업체의 대출공급이 증가하는 등 효과성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편임

<표 2>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 추이

(단위 : 조원, 만 명)

	2008.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법 인		5.54 (150.5)	7.13 (204.4)	8.22 (236.6)	8.20 (235.6)	9.50 (233.9)	10.57 (234.7)	12.6 (253.24)
자산100억 원 이상	4.77 (106.8)	5.02 (139.1)	6.56 (196.8)	7.65 (230.1)	7.58 (228.0)	8.86 (226.4)	9.92 (227.3)	11.78 (244.05)
자산100억 원 미만	0.45 (6.7)	0.52 (11.4)	0.57 (7.6)	0.57 (6.5)	0.61 (7.6)	0.64 (7.5)	0.65 (7.4)	0.82 (9.19)
개 인	0.38 (17.2)	0.38 (17.0)	0.44 (16.3)	0.49 (15.6)	0.49 (15.0)	0.51 (14.7)	0.59 (14.6)	0.64 (14.7)
합 계	5.60 (130.7)	5.92 (167.5)	7.57 (220.7)	8.72 (252.2)	8.69 (250.6)	10.01 (248.6)	11.16 (249.3)	13.24 (267.94)

주: () 안은 거래자 수

2008년 9월 자료는 100억이 아닌 70억이 기준으로, 자산 70억 원 이상과 자산 70억 원

미만으로 나눠짐

자료: 금융위원회

- ❖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극화로 인한 금융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적채무조정제도의 개선안이 시급한 상황

✓국내외 개인신용회복제도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국내 사적채무조정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

II. 국내 신용회복제도의 현황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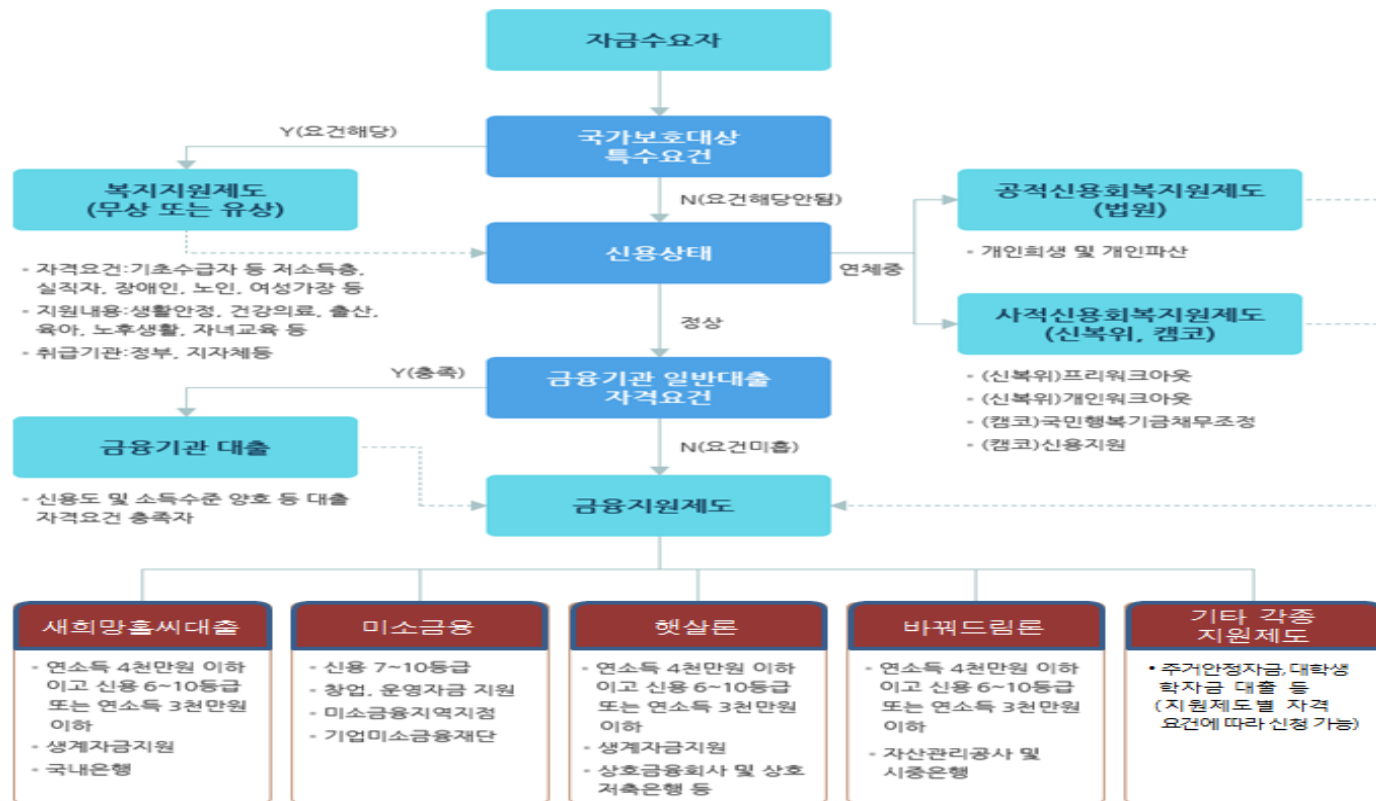


1. 우리나라의 사적 채무자구제제도

Ⅱ. 국내 신용회복제도의 현황 및 실적

- ❖ 국내 서민금융지원체계는 중층구조로 형성되어있어서 외형적으로는 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서민금융시장, 정책적 지원, 채무조정 등의 적절한 금융 서비스의 지원을 받고 있음

<그림 1> 서민금융지원 흐름도



자료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책자

- ❖ 과중한 연체채무자 구제를 위해 사적채무조정제도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을, 공적채무조정제도로 회생과 파산제도를 운용

1. 우리나라의 사적 채무자구제제도

Ⅱ. 국내 신용회복제도의 현황 및 실적

<표 3> 사적·공적 채무조정프로그램 비교

구 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요	계속 소득이 있는 개인의 5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 후 잔존채무에 대해 면책	지급불능 상태에서 현재 보유재산 처분 후에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 원금 및 이자 전부 면책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	일시적인 상환불능에 처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 방지
시행 시기	'04.9월	'02.1월	'13.5월	'02.10월	'09.4월
대상 채무	제한 無 (금융회사 채무 및 사채 포함)	제한 無 (금융회사 채무 및 사채 포함)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한 장기연체채권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회사에 부담한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회사에 부담한 채무
대상 채무자	과다채무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 고정 소득이 있는 봉급 생활자, 영업소득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채무상환이 곤란한자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한 연체채무의 주채무자 및 보증채무자	3개월 이상 연체등록자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자
채무 금액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제한 無	.무담보채무 1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채무 조정 수준	5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 후 전액 면책	보유재산 처분 후 잔여 채무 전액 면책	.연체이자 감면 .일반채무자 원금 최대 50%감면 .사회취약계층 원금 최대 70%감면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을 차등 적용	.무담보 채무 이자 전액 감면 .상각채무 원금 최대 50%감면 .사회취약계층 원금 최대 70%감면	.원금 및 이자 감면 無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
변제 기간	변제기간 5년 이내	재산 청산 후 면책	최장 10년 (일시납 가능)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연체 정보 해제	.변제계획 인가시 연체 해제 .5년간 개인회생 정보등록	.파산면책 결정시 연체 해제 .5년간 개인파산 정보등록	.채무조정 확정시 .2년간 신용회복지원 정보등록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2년간 신용회복지원 정보등록	-
서민 금융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 햇살론 *미소금융, 바뀔드림론은 면책결정 후 가능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 소액대출	지원불가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 미소금융, 햇살론, 바뀔드림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 소액대출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 소액신용카드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 미소금융, 햇살론, 바뀔드림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 소액대출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 소액신용카드	지원가능
보증인 효력	주채무자가 변제금을 상환했다라도 보증인은 감면 금액에 대한 상환의무 有	주채무자가 변제금을 상환했다라도 보증인은 감면 금액에 대한 상환의무 有	.주채무자 상환완료시 보증채무 소멸 .보증인 자체 채무조정 신청 가능	.주채무자 상환완료시 보증채무 소멸 .보증인 자체 채무조정 신청 가능	.주채무자 상환완료시 보증채무 소멸 .보증인 자체 채무조정 신청 가능

2. 신복위의 개인신용회복제도

Ⅱ. 국내 신용회복제도의 현황 및 실적

❖ 채무조정프로그램 비교 및 실적

-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공적구제제도가 개인회생이 채무감면에 집중하는 반면, 워크아웃 등 사적구제조치는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등이 중점이며 채무 감면 비중이 높지 않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65.8%가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에 그침

<표 4> 채무자구제 수단별 이용자 추이(신청자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신복위	법 원			합 계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계	
'02년	0.5(17.8)		2.3(82.2)	2.3(82.2)	2.8(100.0)
'03년	62.6(94.2)		3.8(5.8)	3.8(5.8)	66.4(100.0)
'04년	287.4(93.1)	9.0(2.9)	12.3(4.0)	21.3(6.9)	308.7(100.0)
'05년	193.7(68.9)	48.5(17.3)	38.8(13.8)	87.3(31.1)	281.0(100.0)
'06년	85.8(32.3)	56.1(21.1)	123.7(46.6)	179.8(67.7)	265.6(100.0)
'07년	63.7(23.7)	51.4(19.1)	154.0(57.2)	205.4(76.3)	269.1(100.0)
'08년	79.1(32.2)	47.9(19.5)	118.6(48.3)	166.5(67.8)	245.6(100.0)
'09년	101.7(38.1)	54.6(20.4)	110.9(41.5)	165.5(61.9)	267.2(100.0)
'10년	84.6(39.1)	46.9(21.7)	84.8(39.2)	131.7(60.9)	216.3(100.0)
'11년	91.3(40.4)	65.2(28.8)	69.7(30.8)	134.9(59.6)	226.2(100.0)
'12년	90.1(37.2)	90.3(37.4)	61.5(25.4)	151.9(62.8)	241.9(100.0)
'13년	97.1(37.4)	105.9(40.7)	57.0(21.9)	162.9(62.6)	260.0(100.0)
'14년	85.2(33.9)	110.7(44.0)	55.5(22.1)	166.2(66.1)	251.3(100.0)
'15년	91.5(37.3)	100.1(40.8)	53.9(21.9)	154.0(62.7)	245.5(100.0)
누 계	1,414.4(44.1)	786.7(24.5)	1004.3(31.3)	1,791.0(55.9)	3,205.5(100.0)

주: () 내는 구성비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2. 신복위의 개인신용회복제도

표. 국내 신용회복제도의 현황 및 실적

- ❖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확정 기준) 추이에 의하면, 프리워크아웃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나 2015년까지 88천명에 2.5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워크아웃은 1,185천명에 41.7조원의 지원실적으로 기록하여 단기연체의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음

<표 6>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추이

(단위 : 천명, 조원)

구 분		'03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프리워크아웃	인원	-	6	5	12	17	20	14	14	88
	금액	-	0.2	0.2	0.3	0.4	0.6	0.4	0.4	2.5
워크아웃	인원	717	81	67	67	64	66	60	63	1,185
	금액	23.9	2.7	2.6	2.8	2.4	2.5	2.4	2.4	41.7
합계	인원	717	87	72	79	81	86	74	77	1,273
	금액	23.9	2.9	2.8	3.1	2.8	3.1	2.8	2.8	44.2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 ❖ 신복위의 채무조정대상중 원금감면대상이 되는 상각채권의 경우 전체채권중 계좌수 기준으로는 49% 차지하며, 인원수 기준으로는 63.4%, 금액기준으로는 42%를 차지하고 있음
- ❖ 연령대별 지원실적에 의하면 30대(35.9%) >40대(31.7%) >50대(15.0%) 순으로 나타남
- ❖ 1인당 연평균소득금액은 11,639천원으로 월 100만원이하(51.8%) >100~150만원이하(31.6%) >150~200만원이하(12.1%) 순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 ❖ 1인당 평균 채무액은 33,499천원으로 소득수준에 비해 많아 연체가능성이 높음
- ✓ 1,000만원 이하의 채무비중도 20%에 달하고, 1~2천만원의 부채비중이 27.0%달해 약 절반 정도는 부채수준이 크지 않아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신용회복의 가능성이 높음

2. 신복위의 개인신용회복제도

Ⅱ. 국내 신용회복제도의 현황 및 실적

<표 12> 1인당 평균 채무비중

(단위 : 명, %)

구분	500만원이하	500~1,000만원	1,000~2,000만원	2,000~3,000만원	3,000~4,000만원
인원	104,274	179,682	354,983	246,159	157,626
비중	7.9	13.7	27.0	18.7	12.0
구분	4,000~5,000만원	5,000만원~1억원	1억~3억	3억~5억이하	합계
인원	96,424	143,872	30,660	1,584	1,315,264
비중	7.3	10.9	2.3	0.1	100.0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 ❖ 다만 채무조정신청자 평균 연체 기간은 47.0개월로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연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체초기에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09. 4월 ~ '15년말까지 접수자 51만 8천명 기준

- ❖ 프리워크아웃 지원형태별 분석

- ✓ 연령대별 비중은 워크아웃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30대(34.0%) > 40대(32.6%) > 50대(16.5%) 順

- ✓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3,517천원으로 낮은 수준임

월 100만원이하(32.3%) > 100~150만원이하(31.8%) > 150~200만원이하(20.0%) 順

- ✓ 1인당 평균 총채무액은 35,304천원으로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편임

1~2천만원이하(23.7%) > 2~3천만원이하(19.9%) > 5천원~1억원이하(13.5%) 順

- ❖ 채무조정신청자의 평균 연체 일수는 41.7일로 비교적 짧은 편이나 연체 초기에 좀 더 적극적인 신용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가 필요

3. 최근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내용

*본장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요약한 것임

Ⅱ. 국내 신용회복제도의 현황 및 실적

(1) 채무조정제도 개편방안('16.1.28)

- ❖ 금융위원회는 '15.6.23. 「1단계 서민금융 지원대책」에 이어 「2단계 서민금융 지원대책」으로 채무조정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발표('16.1.28)
 - 주요내용으로는 i)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도입, ii) 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 등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선안을 마련
 - *「1단계 서민금융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i) 서민금융 공급확대 및 금리인하, ii) 성실상환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iii) 서민의 자활과 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이 주요골자
- ❖ 탄력적 채무감면체계 도입
 - 현행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감면율은 50%이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지표로 채무자의 채무원금 대비 가용소득의 비율인 변제 소요기간을 산출하여상 채무자별로 30~60% 범위 내에서 원금감면율을 차등화하여 채무감면의 성공률을 높이고, 채무자의 신용회복에 기여
- ❖ 매입채권 감면기준 개선
 - 현재 대부업체·자산관리회사(AMC) 등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원금감면율은 여타 금융회사 채권의 감면율과 달리 최대 30%를 적용하고 있으나 상환능력지표에 따라 채무자별로 30~60% 범위 내에서 감면율을 차등 적용

3. 최근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내용

Ⅱ. 국내 신용회복제도의 현황 및 실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의 70%까지 감면하고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받고 채무원금이 1천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대하여 상각채권 원금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원금상환능력을 제고

❖대부업체 채권 조정기준 개선

-현재 대부업체 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나 대부업체 채권도 타 금융회사 채권과 마찬가지로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채무조정에 포함하여 대부업체 채권 연체자들의 사적채무조정 유인 강화

❖채무조정 심사강화

-채무조정 신청인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위해 현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소득증빙 서류외에 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수 징구서류에 추가하여 채무자의 소득이력·수준 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현재 변제계획 이행 중 실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 원금상환 유예기간의 이자율은 연 2.0%를 적용하고있으나 채무의 성실상환 유도를 위해 재조정 전 변제계획 상환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연 1.0%의 유예기간 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간이 48개월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

(2) 신복위 법정기구화에 따른 채무조정 실효성 제고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을 전부 개정하여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

❖복잡·다기한 서민금융 지원 제도(상품) 단순화 및 자원 통합관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활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신용회복제도의 실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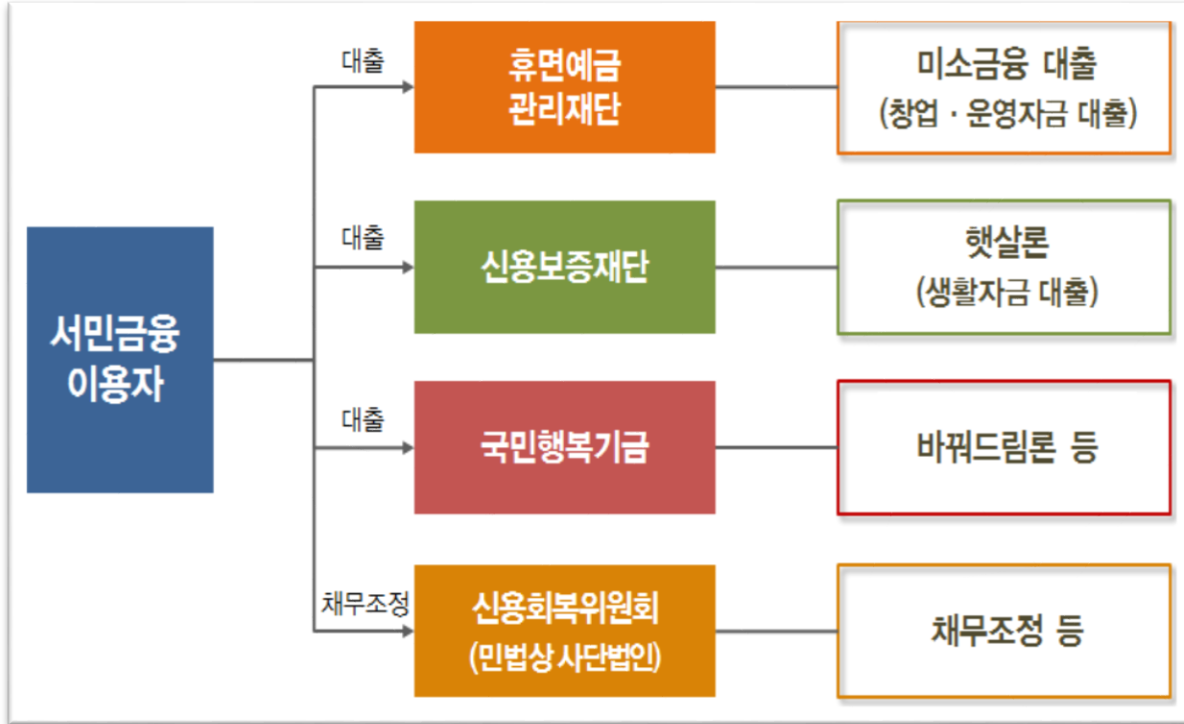
- ✓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갖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
- ✓ 법정기구가 된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기관도 대폭 확대
-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캠프, 보증기관(신·기보 등),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업체(금융위 등록), 파산재단 등을 추가하는 등 협약체결 대상기관도 확대
협약체결 기관이 현재 3,651개에서 약 4,600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
예상 추가기관은 대부업체 100여개, 신협조합 350여개, 새마을금고 240여개 등임

3. 최근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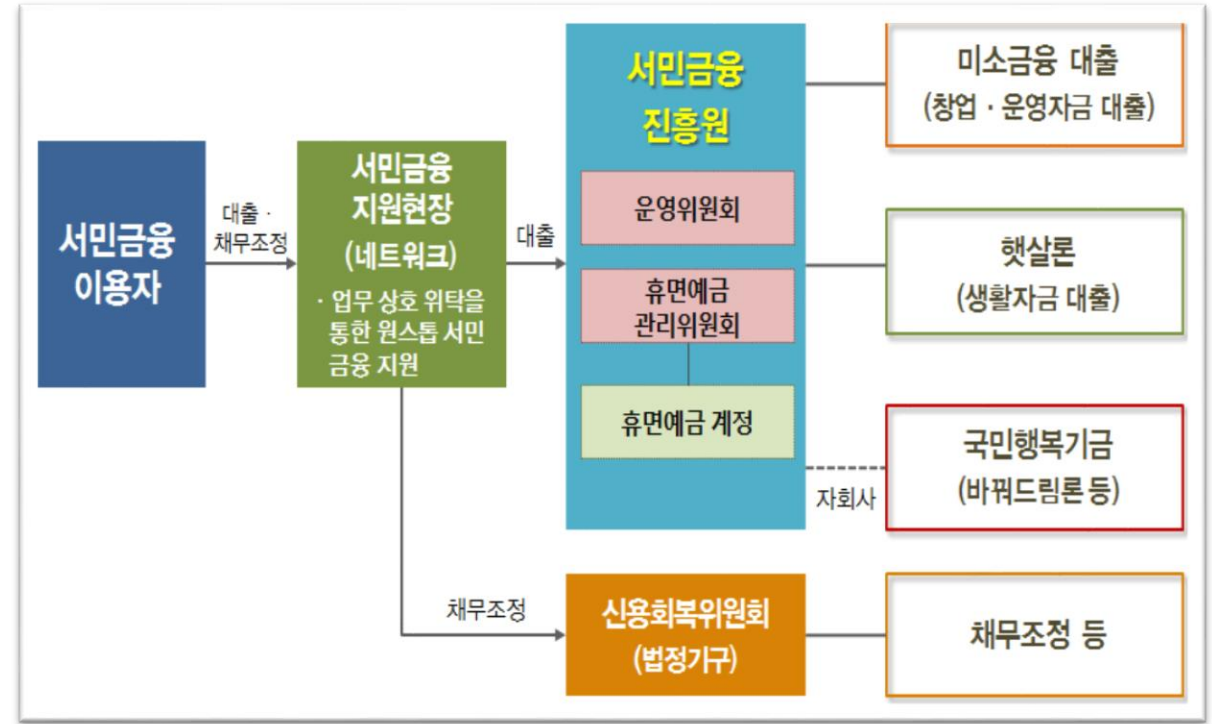
Ⅱ. 국내 신용회복제도의 현황 및 실적

<그림 2> 신복위 법정기구화에 따른 구조 변화

1. 현 재



2. 설립후



- ① (진흥원) 자금공급(미소금융), 개인보증(햇살론) 등 자금지원 업무 통합
- 국민행복기금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바꿔드림론'도 통합·관리
- ② (신복위) 진흥원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 설치
- ③ (업무 상호위탁) 서민금융 지원 현장에서 진흥원-신복위간 상담·접수 등 단순 업무 위탁을 통해 효과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4.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

Ⅱ. 국내 신용회복제도의 현황 및 실적

❖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정부는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해소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2013.3.29.)으로 전환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으로 6개월 이상의 연체채무자의 경우 채무조정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돼 자활의 기회가 제고

<표 20> 신용회복기금과 국민행복기금 비교

	신용회복기금	국민행복기금
법적 성격	• 상법상 주식회사	• 상법상 주식회사로 우선 출범 후 법정 기금화 추진
한시성 여부	• 시장기능에 따른 상시적채무조정 기능	• 시장에서 채무조정이 곤란한 장기연체채무자 등에 대해 한시적. 일시적으로 지원 확대 ※한시적. 일시적 지원확대 이후에는 재원범위 내에서 시장기능에 따른 채무조정 및 전환대출 지원
사업범위 및 지원대상	• 채무조정 - 금융회사* 등에 연체채무가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 대상 * 협약가입 금융회사 : 221개	• 채무조정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채무가 남아 있는 금융채무연체자 대상 * 4천여개 금융회사. 대부업체 가입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상록수 등
	• 전환대출 -소득 2,600만원 이하(저신용층(6~10등급)은 소득 4천만원 이하)	• 전환대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소득 4천만원 이하 대상(6개월 한시)
지원 조건	• 채무조정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	• 채무조정 -자활의지, 상환능력 등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
	• 전환대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내외 금리의 대출로 전환	• 전환대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내외 금리의 대출로 전환

자료: 금융위원회

4.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

Ⅱ. 국내 신용회복제도의 현황 및 실적

❖ 국민행복기금 출범이후 3년간 총 49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

- ✓ 2013년 4월~2016년 2월까지 채무조정 지원자 중 총 28.3만명(금융회사 채권 매입 기준)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의하면 장기연체된 소액채권이 대다수이며 중장년 저소득 채무자를 위주로 지원되었음

<표 2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지원자 연령별 비중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명수(만명)	1.2	5.2	8.6	8.9	4.4	28.3
비중(%)	4.4	18.5	30.4	31.6	15.1	100.0

자료: 국민행복기금(분석기간: 2013.4~2016.2)

- ✓ 소득수준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 비중이 55.5%, 1,000만원~1,000만원 비중이 27.2%로 2,000만원 이하가 거의 대부분(82.7%)을 차지

<표 22>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지원자 소득수준별 비중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이상	합계
명수(만명)	15.7	7.7	3.1	1.5	0.3	28.3
비중(%)	55.5	27.2	10.9	5.3	1.1	100.0

주: 신고소득 기준, 자료: 국민행복기금

- ✓ 총채무액별 비중에 의하면 500만원 미만이 43.0%로 가장 많고, 500~1,000만원이 21.8%, 1,000~2,000만원이 19.3%로 2,000만원 이하가 거의 대부분(84.1%)임

<표 23>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지원자 총채무액별 비중

	500만원 미만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이상	합계
명수(만명)	12.2	6.2	5.5	2.3	2.1	28.3
비중(%)	43.0	21.8	19.3	8.1	7.8	100.0

자료: 국민행복기금

- ✓ 연체기간은 평균 6년 10개월 수준으로 장기 연체상태에 있음
- ✓ 채무원금과 연체기간을 고려해보면 소액채무로 장기간 고통 받는 채무자가 주된 지원대상으로 나타남

<표 24>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지원자 연체기간별 비중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7년	7년 ~ 10년	10년 이상	합계
명수(만명)	0.3	6.7	6.3	3.0	3.9	8.0	28.3
비중(%)	1.1	23.8	22.4	10.6	13.8	28.3	100.0

자료: 국민행복기금

4.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

- ✓ 채무원금 감면은 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채무자별 소득, 연령, 연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평균 원금 (채무자가 빌려서 사용한 금액) 감면율은 약 53.7% 수준

<표 25>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지원자 원금감면율 분포 비중

	30%~40%	~ 50%	~ 60%	~ 70%	합계
비중(%)	11.8	53.9	25.7	8.6	100.0

자료: 국민행복기금

❖ 바뀐드림론의 실적

- ✓ 국민행복기금은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채무를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하여 이자 경감을 도모하는 바뀐드림론도 지원
- ✓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연체채권 매입·이관(약 270만명) 및 바뀐드림론 지속 공급을 위해 5년간 총 1.5조원의 재원조달 계획 수립
국민행복기금 초기에는 약 8천억원(신용회복기금, 차입금) 규모의 재원으로 우선 출범

<표 26> 바뀐드림론 개요

구 분	바뀐드림론
지원대상	▪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② 4천만원 이하인 저신용자(6등급 이하)로,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 상환 중인 분들
지원방법	▪은행에서 10% 수준의 저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환대출 지원 *국민행복기금이 대출 보증
상환방식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Ⅱ. 국내 신용회복제도의 현황 및 실적

- ❖ 연체 없는 고금리 대출(6~10등급/특수채무자)을 10% 이하의 대출(대출이율: 6.5%~10.5%)로 전환해주는 대출(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연 금리 20% 이상 고금리 채무)로는 국민행복기금의 바뀐드림론(보증대출)이 있으나 보증재원의 부족과 연체율 상승으로 실적이 크지 않은 편임

<표 42> 바뀐드림론 실적

(단위: 건 억 원)

구분	바뀐드림론(신용보증)	
	인원	금액
2011년 이전	31,505	3,116
2011년	46,164	4,752
2012년	62,734	6,727
2013년	57,040	6,226
2014년	17,296	2,236
2015년	9,816	1,257
누적실적	224,555	24,214

Ⅲ.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의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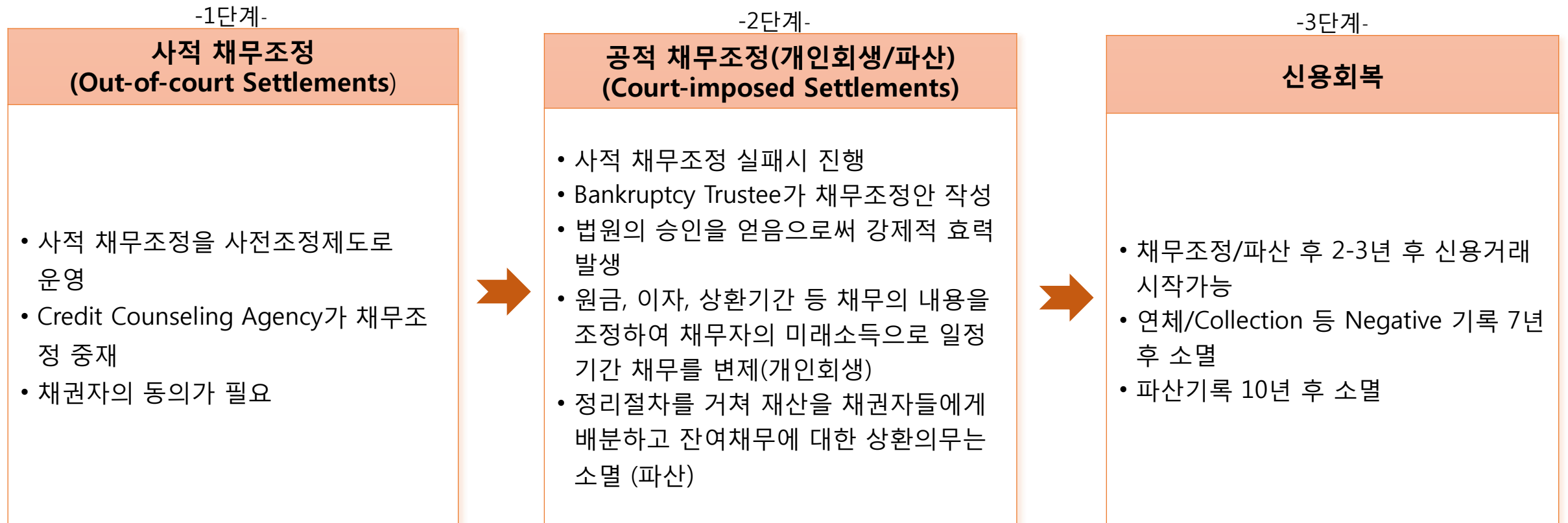
Ⅲ.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의 사례 및 시사점

(1) 미국의 채무자구제제도 사례

가. 채무자구제 관련입법 동향

- ❖ 1898년 파산법(Bankruptcy Act) 제정 이후 파산법이 채무자의 보호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으로 2005년 '파산남용금지 및 소비자보호법(BAPCPA)'이 입법되기도 함
- 파산신청 이전에 사적 구제제도인 신용상담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신용 및 채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소득심사(means-testing)를 받도록 하는 등 파산의 남용(abuse)을 막기 위한 장치를 도입

<그림 3> 미국의 채무자구제 단계



1.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 사례

Ⅲ.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의 사례 및 시사점

나. 공적 채무자구제 제도

- ❖ 미국의 공적 채무자구제 제도는 청산형인 제7장(Chapter7, 개인파산)과 재건형인 제13장(Chapter 13, 개인회생)으로 구성
- ✓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사전신용상담 이수를 완료한 자로서 자신의 정기적인 수입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상환할 수 있는자
- ✓ 채권자의 동의(의결)는 필요치 않으며, 재판부가 인가여부를 결정

<표 27> 미국 공적채무자 구제제도 신청자 추이

	전 체				전 체		
		제7장	제 13장			제 7장	제 13장
2002	1,539,111	1,087,602	450,516	2009	1,412,838	1,008,870	402,462
2003	1,625,208	1,156,274	467,999	2010	1,536,799	1,100,116	434,739
2004	1,563,145	1,117,766	444,428	2011	1,362,847	958,634	402,454
2005	2,039,214	1,631,011	407,322	2012	1,181,016	816,271	363,280
2006	597,965	349,012	248,430	2013	1,038,720	706,499	330,899
2007	822,590	500,613	321,359	2014	909,812	600,885	307,783
2008	1,074,225	714,389	358,947	2015	819,760	519,130	299,515

자료: www.uscourts.gov

다. 사적 채무자구제 기관

- ❖ 미국의 사적 채무자구제 기관은 소비자금융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부응하기 위해 1950년대 민간 비영리기구형태로 설립
- ❖ 미국의 사적 채무자구제 기관은 채무자의 금융관련 교육과 채무관련 상담은 물론,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접촉하고 상환조건의 협상 및 상환을 대행하는 등 적극적인 채무관리계획(debt management plan) 프로그램을 운용
NFCC(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와 AICCCA(Association of Independent 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의 양대 협약기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다수의 비영리 독립상담기구가 존재
- ❖ 채무관리계획(debt management plan) 프로그램
 - ✓ 채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자들과 접촉하여 상환조건, 일정 등을 조정하고 부채상환행위를 대행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에 의해 시행되며 변제계획에 따른 월 채무상환액 납부 시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상환하며, 통상 원금감면없이 이자감면,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기간 연장(통상 3~5년간 상환) 등의 방식으로 진행
- ❖ 파산 신청 전 사전상담
연방파산프로그램(trustee program)에 따라 신용상담기구들은 파산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현재 선택 가능한 채무상환방법 및 제도에 대한 정보, 지출관리계획, 예산작성 및 실행계획 등에 대한 등을 제공
신용상담기구는 파산 전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사전상담 필증을 교부

1.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 사례

Ⅲ.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의 사례 및 시사점

(2) 영국의 채무자구제 제도

가. 공적 채무자구제 제도 현황

- ❖ 공적인 채무자구제 제도로는 자발적 개인채무 조정(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 : IVA)과 개인파산(bankruptcy order : BO)이 있음
2009년에는 15,000 파운드 이하의 소액자산을 가진 경우에 적용되는 부채구제명령(Debt Relief Orders : DROs) 제도가 추가
IVA는 개인파산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융통성이 있으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 개인파산(BO)은 개인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로서 우리의 파산절차와 유사
다른 선택가능한 부채문제 해결책을 적용할 수 없도록 채무가 과중한 경우 신청 가능

<표 28> 영국 개인파산 관련제도 신청자 추이

	전 체				전 체		
		파 산	IVA			파 산	IVA
2002	30,587	24,292	6,295	2009	134,143	74,671	47,641
2003	35,604	28,021	7,583	2010	135,046	59,173	50,694
2004	46,651	35,898	10,753	2011	119,943	41,876	49,058
2005	67,584	47,291	20,293	2012	109,660	31,787	46,694
2006	107,288	62,956	44,332	2013	100,998	24,571	48,881
2007	106,645	64,480	42,165	2014	99,223	20,345	52,190
2008	106,544	67,428	39,116	2015	79,965	15,797	39,993

주: DROs 신청자 2009년: 11,831, 2010년: 25,179, 2011년: 29,009, 2012년: 31,179, 2013년: 27,546, 2014년: 26,688, 2015년: 24,175

자료: www.insolvency.gov.uk

나. 사적 채무자구제 기관

- ❖ 영국의 사적 채무자구제 기관은 CAB(Citizens Advice Bureau)와 SCDC(StepChange Debt Charity)가 대표적
- ❖ CAB(Citizens Advice Bureau)
 - ✓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영리 상담기구인 CAB(Citizens Advice Bureau)는 1939년 설립되었으며, 전국적으로 2천여 개의 지사에서 약 28,000명이 근무 중이며, 이중 70% 이상명은 자원봉사자로 구성
채무상담, 채무조정, 취업알선, 주거문제, 소비자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상담 지원
 - ✓ 영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전체 예산의 약 80%) 및 법률지원기구, 복권기금, 자선단체, 기업, 개인 등의 재정적 지원 및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채권자에게서 받는 부분은 없음
 - ✓ 채무상담과 관련하여 CAB는 소비자의 재정상태, 부채현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소비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
 - ✓ CAB는 저소득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변제계획(DMP)도 수립
채무상환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운영하며, 채무자의 소득 및 채무상황에 따라 이자 및 원금탕감도 가능
채권자 중 일부라도 부동의하면 IVA나 청산절차로 이행하게 되나,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편임
 - ✓ CAB는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의무에 대한 정보부족에 따른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 중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을 중시하고 있음

1.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 사례

Ⅲ.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의 사례 및 시사점

- ❖ SCDC(StepChange Debt Charity)
- ✓ SCDC는 미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ling Service)를 모델로 1993년 설립되었으며 영국 전역에 10개의 지역센터와 1개의 파트너십을 두고 있음(직원 700여명이며, 이중 상담원은 177명)
- ✓ 주요업무는 부채-재무 상담, 채무조정협상, 채무변제계획(DMP) 작성, 채무관리 계좌 관리 등을 지원
- ✓ 상담원은 채무자의 재무상태, 재산 및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채무변제계획, IVA, 개인파산 등 선택가능한 해결방법 중에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
- ✓ 정부시책으로 시행중인 Debt Relief Order(DRO) 신청에 필요한 서식 작성 및 제도 안내 등을 제공
DRO는 소액채무자 구제제도로서 승인되면 일년동안 채무 상환이 유예(moratorium)되며, 일년 후에도 지급불능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무 전액이 탕감

<표 29> CAB와 SCDC 비교

구 분	CAB	SCDC
재원 조달	정부 자금	금융기관 분담금
상담 분야	주거, 복지, 부채, 고용 등	부채
근무 인원	28,500여명(이중 22,000명은 자원봉사자)	700여명
상담 방법	대면 상담 비중이 높음	전화 상담 비중이 높음
채무변제계획	- 상환기간 : 10년이내 - 필요시 이자 및 원금 탕감 가능	- 상환기간 : 10년이내 - 이자 및 원금 탕감 불가
채무소송대리	가능	불가
변제 방법	채무자가 월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지급	CCCS가 월변제금을 받아 채권자에게 전달

(3) 독일의 채무자구제제도

가. 공적 채무자구제 제도 현황

- ❖ 독일식 채무자구제 제도의 특징은 개인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의 중재 하에 최장 6년간 채무재조정 (Wohlverhaltensphase)을 시도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에 청산절차(파산)에 착수하는 단계적인 신용회복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 ❖ 또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산신청 최소 6개월 이전에 재판 이외의 방법을 통해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

<표 30> 독일 개인파산 관련제도 신청자 추이

	개인파산				개인파산		
		소비자파산	기타			소비자파산	기타
2001	17,048	13,277	3,771	2008	125,911	98,140	27,771
2002	46,849	21,441	25,408	2009	130,220	101,102	29,118
2003	61,403	33,609	27,794	2010	136,460	108,798	27,662
2004	79,061	49,123	29,938	2011	129,319	103,289	26,030
2005	99,711	68,898	30,813	2012	122,001	97,608	24,393
2006	127,293	96,586	30,707	2013	115,337	91,200	24,137
2007	136,437	105,238	30,199	2014	110,786	86,298	24,488

주: 기타는 개인파트너십, 전직 자영업, 파산상속의 합, 자료: www.destatis.de

나. 사적 채무자구제 기관

-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빙받기 위하여 공인된 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채무상담은 주로 소비자협회(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VZBV)나 등록된 채무상담센터(Schuldnerberatung)에서 담당
- ❖소비자협회(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VZBV)
 - ✓ VZBV는 소비자보호단체로 16개의 소비자 센터와 25개의 상이한 소비자 기구들의 연합회 성격의 조직
 - ✓ 예산은 정부지원금, 출판물 수입금, 멤버 회비, 기타 특별수입금 등으로 조달
 - ✓ 입법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견을 피력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에 주력
 - ✓ 16개의 소비자센터는 주거, 복지, 에너지, 의료, 노인문제 등 전반적인 소비자문제의 일환으로서 채무상담 서비스를 제공
 - ✓ 채무상담서비스의 경우 각 소비자센터는 소비자의 소득수준, 부채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역할
 - ✓ 저신용자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으나, 채무변제계획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용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채무상담센터(SB:Schuldnerberatung)

- ✓ 중앙 협회성격의 BAG-SB와 주단위 LAG SB는 회원 간의 유대관계를 관리하는 umbrella 조직 성격
각 Schuldnerberatung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비영리단체로, 소속 상담사 규모는 개별 단체별로 1~5명 수준이며 독일 전역에서 1,700 여명의 상담사가 활동 중
사적조정절차에서 채무자의 채무변제계획 수립과 채권자와의 협상을 지원하며,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조력하고 파산신청 전 상담을 수행
- ✓ 1980년대 초반 사회사업 형태로 도입된 부채상담기관으로 현재 약 1,050개의 상담센터가 독일 전역에 분포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나 자선단체로부터 조달하며, 무료로 상담을 제공
- ✓ 사적조정절차에서 채무자의 채무변제계획 수립과 채권자와의 협상을 지원하며,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조력하고 파산신청 전 상담을 수행

(4) 일본의 채무자구제제도

가. 공적 채무자구제 제도 현황

❖ 일본의 채무자구제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미국 파산법 제13장의 절차를 따라하였으나 소규모개인회생과 급여소득자회생으로 절차를 분리

<표 31> 일본 개인파산 관련제도 신청자 추이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규모개인회생	급여소득자회생			소규모개인회생	급여소득자회생
2002	224,467	6,054	7,444	2009	137,957	19,452	1,936
2003	251,800	15,001	8,611	2010	131,370	17,594	1,399
2004	220,261	19,552	6,794	2011	110,448	14,479	1,191
2005	193,179	21,218	4,830	2012	92,552	9,763	906
2006	174,861	22,379	3,734	2013	81,137	7,342	722
2007	157,889	24,586	3,086	2014	73,368	6,646	611
2008	140,941	21,810	2,242	2015	71,533	-	-

자료: www.courts.go.jp

나. 사적 채무자구제 기관

- ❖ 일본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의 공적인 제도의 이용은 감소하는 반면, 임의정리(任意整理) 제도라는 사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이 증가
- ❖ 임의정리(任意整理) 제도
 - ✓ 임의정리 제도는 법원의 개입없이 일본크레딧카운셀링협회(Japan Credit Counselling Organization, JCCO)라는 신용상담기구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
 - ✓ JCCO는 변제가 어려운 다중채무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1987년에 설립
전화 및 면접 상담을 실시하여 채무의 감액이나 분할상환 등 변제조건을 교섭하고, 변제계획을 세우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음
 - ✓ 무료상담은 하지만 실질적인 채무조정은 지역 변호사협회에서 추천된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짐
임의정리,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절차를 변호사가 조력하고 수임료를 받음
 - ✓ 예산은 정부지원금 미 소속협회(은행연합회, 대부금협회, 신용협회 등)의 지원금으로 운영

2.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 시사점

Ⅲ.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의 사례 및 시사점

- ❖ 법원 업무의 과중과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고, 채무자의 법적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적인 제도 신청 이전에 개인워크아웃과 같은 사적 채무자구제 제도의 이용을 의무화할 필요
 이를 위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원금감면이 거의 불가능한 현행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이용유인을 높여야 할 필요

<표 32> 주요국 사적조정제도 비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채무조정 중재기관	NFCC 등 민간단체	CAB, SCDC 등 민간단체	변호사, 소비자 단체 등	크레디트카운셀링협회, 변호사	신용회복 위원회
조정대상채무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협약가입 기관채무
신청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 단되는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 채무액, 자산 등 자격제한
변제기간	3~5년	최장 10년	통상 6년	3~5년	최장 10년
경비조달	채권자/고객	정부지원금 /단체기부금	지자체/자선단 체	회원회비	금융기관 기부금

2.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 시사점

Ⅲ.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의 사례 및 시사점

-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공적인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
 - 1) 채무자가 전략적 파산자(strategic bankrupt)가 아닌지를 가려내고,
 - 2) 보호받아야 할 채무자인 경우 적극적으로 새출발(fresh start)을 도와줄 필요
- ❖ 안이한 면책을 억제하고 건전한 재건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건형 절차(개인회생)를 우선 적용하고, 이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만 청산형 절차(개인파산)에 착수하는 단계적인 신용회복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

<그림 5> 3단계 채무자구제 제안



IV. 사적채무조정제도의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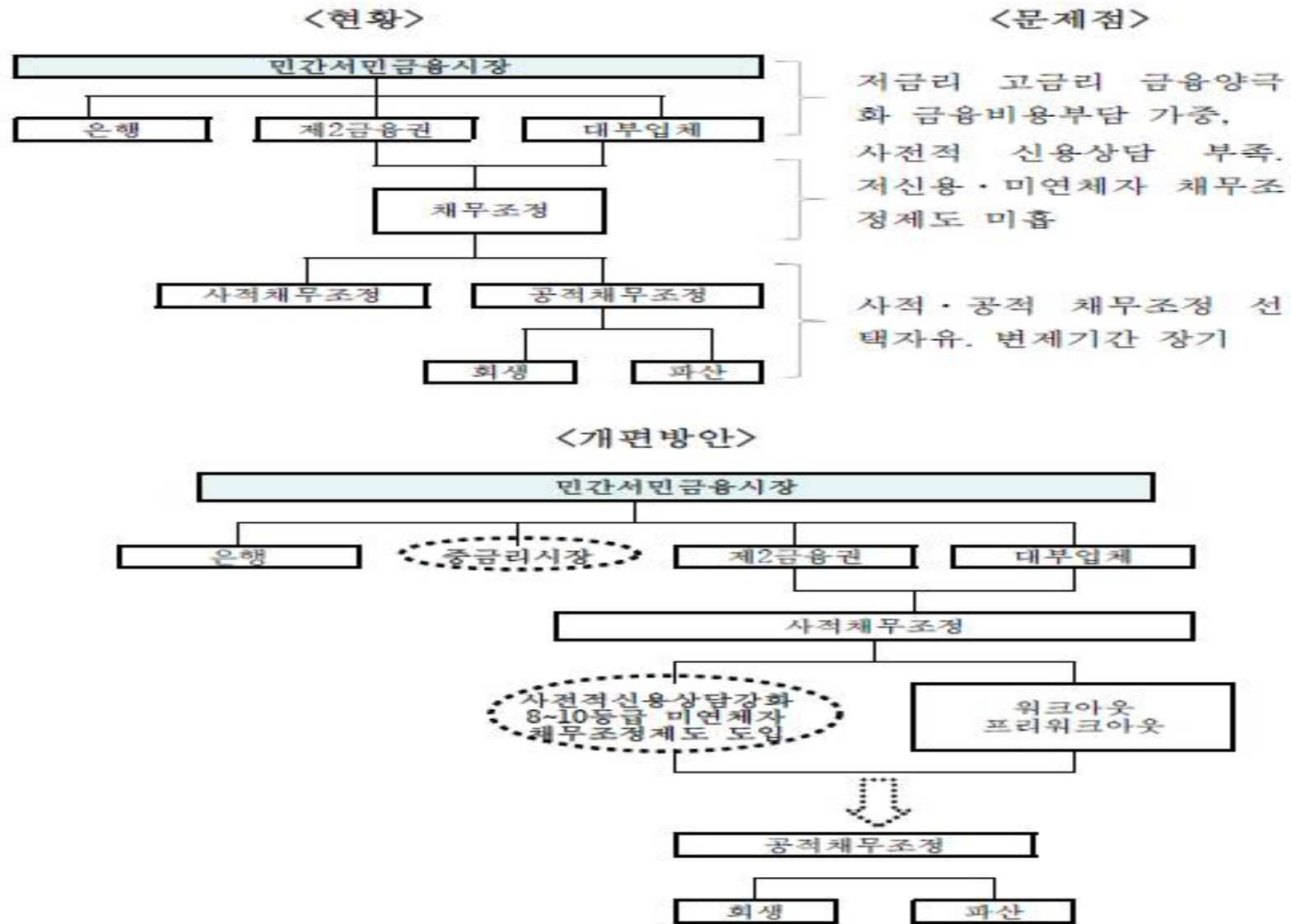


- ❖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장기침체와 금융의 양극화로 인해 저신용자들의 대부업체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좀 더 종합적이고 과감한 서민금융제도의 개선이 시급
 - 정부정책에 의한 개선효과보다 경기 양극화와 금융 양극화에 의한 저신용자의 금융 악화가 더욱 심화
- ❖ 국내 채무조정제도의 단점은 금융의 양극화로 20% 이상의 고금리로 인한 저신용자의 금융비용부담 가중과 잠재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가 부재하여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고, 이미 연체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채무조정을 시행하기 때문에 신용회복도 쉽지않다는 점임
- ❖ 향후 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는 금융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금리시장의 확대, 고금리를 쓰고있는 미연체 저신용자에 사전 채무상담과 신용교육, 금융지원 확대와 사적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의 확대 적용)의 도입,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위한 공적 채무조정신청전 사적 채무조정 의무화, 사적·공적 채무조정시 변제기간 단축을 통한 신용회복의 단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1) 서민 금융제도의 종합적인 개편방향

IV. 사적채무조정제도의 개선방안

<그림 17> 서민금융제도 개편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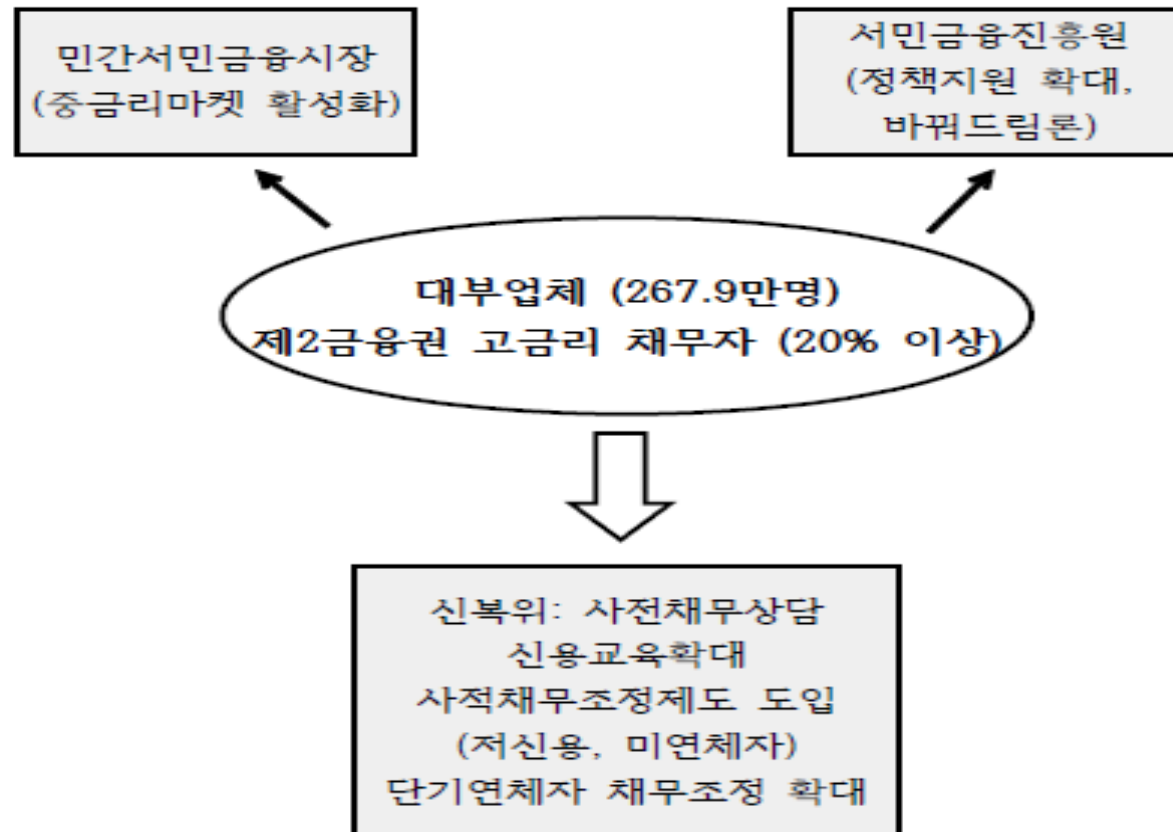
주: (점선): 정책적 우선순위가 필요한 부분

(2) 사적채무조정 대상 미연체 잠재연체자까지 확대

IV. 사적채무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 20%가 넘는 고금리를 쓰고있는 미연체 저신용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현재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과 바뀔드림론이 있으나 효과성이 높지않아 8~10등급 사이의 미연체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사적채무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의한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

<그림 18> 미연체 잠재연체자 구제방안



- ❖ 저금리·고금리 금융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해 정부도 최근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9개 은행들이 취급하는 사잇돌 중금리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4~7등급의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시장 자율에 기반하기 때문에 활성화는 오랜시간이 필요
- ❖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CB 기준 8~10등급의 저신용자들의 경우 20% 이상의 고금리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소득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금리 금융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결국에는 연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이러한 20% 이상의 고금리를 쓰고있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금리의 혜택이 어렵기 때문에 연체전이라도 사전 신용상담과 채무조정에 의한 구제가 시급
- ❖ 채무조정대상을 소득수준이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8~10 등급 사이의 미연체 저신용자까지 확대하되 먼저 사전 신용상담을 철저히 한 후 원금 감면 없이 이자감면과 상환기간(최장 6년 이내)의 조정에 의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 잠재연체자의 모럴해저드를 최소화 하기위해 신복위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연계하여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

- ❖ 현재 다중·과중 연체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은 사적·공적 채무조정 모두 가능하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적채무조정 신청 전 사적채무조정이나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
 - * 해외 주요국들은 대부분 사적채무조정제도를 사전에 거쳐야만 공적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
 - * 회생 및 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전 사적채무조정의 의무화를 위해서는 통합도산법을 개정하여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야 함
- ❖ 공적채무조정은 최후의 신용회복수단이 되야만 연체채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저신용자의 경우 본인이 직면하고 있는 부채의 심각성, 구제방안, 채무자의 권리 등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적 채무상담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

(4) 신복위의 사전 채무상담 및 신용교육 기능 확대

IV. 사적채무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 채무문제는 조기에 진단되고 대처방안이 모색되어야하나 국내의 경우 저신용자들은 감당하기어려운 고금리 대출을 장기간 방치하여 연체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사적 또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 이 때문에 채무조정에 앞서 채무문제의 조기 진단과 사전 예방 등이 매우 중요하며, 채무조정과 연계하여 사전채무상담과 신용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
- ❖ 신복위의 기능은 신용상담과 신용교육, 그리고 사적채무조정제도의 운영으로 이루어져있으나 상당부분 사적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채무상담과 신용교육의 실적은 상당하나 사전예방기능관련 실질적 효과는 미흡
 - * '15년 채무상담 485,554건, 신용교육(횟수)은 1,937회
 - 아직까지 연체자의 실질적 신용회복은 사적채무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체 예방을 위해서라도 사전적 채무상담과 신용교육이 매우 중요
 - 신복위의 조직도 이러한 수요에 맞춰 채무상담과 신용교육에 필요한 조직을 확대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도 충원하는 것이 중요
 - 현재 직원 365명(콜센터 등 외부용역 140명 포함)으로는 채무상담, 신용교육, 채무조정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고, 신용상담사 자격을 지닌 전문인력들을 확충하여 채무상담기능과 신용교육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
 - * 신복위의 신용상담사의 수는 현재 194명이며, 신용상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요건강화와 함께 양적 확대도 검토

- ❖ 사적, 공적 채무조정시 변제기간 길면 그만큼 신용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변제기간을 5~6년 이내로 제한하여 연체자의 빠른 신용회복을 통해 자활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
대체적으로 미국(변제기간: 3~5년), 독일(통상 6년), 일본(3~5년) 등 주요국의 사적채무의 변제기간은 5~6년이내이며, 한국의 경우 최장 10년으로 그만큼 신용회복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음
신청자격도 미국, 영국, 독일은 제한이 없어 국내상황에 비해 미연체자들도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회생과 파산 전에 장기연체와 같은 사전적 예방차원에서의 역할이 강조됨
변제기간이 단축된다고해서 평균 상환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6년내에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감면율을 산정한후 매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환금액이 결정됨

❖ 소액의 장기연체채무자에 대한 원금 탕감을 통해 신용회복을 도모

- 예를들어 100만원이하 5년 이상의 연체채무의 경우 도덕적해이와 관계도없고 채무상환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원금 탕감을 통해 신용을 회복해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함

* 국민행복기금 지원자중 28.3만명 분석결과: 채무 500만원이하 43%, 연체 5년이상 52.7% 차지

- 영국의 소액연체채무구제제도인 Debt Relief Order(DRO) 참조

* DRO 신청조건 : 채무(학자금 대출, 담보채권, 벌금 등은 제외)가 £ 15,000이하, 월 최저 생계비 차감 후 잉여소득이 £ 50이하, £ 1,000이하의 자동차 외 보유자산이 £ 300이하, 주택 소유자 제외

* DRO는 소액채무자 구제제도로서 승인되면 일년동안 채무 상환이 유예(moratorium)되며, 일년 후에도 지급불능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무 전액이 탕감

감사합니다
